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041
----------	------

발의연월일 : 2020. 9. 18.

발 의 자 : 소병훈 · 전해숙 · 임종성
남인순 · 송재호 · 인재근
서영석 · 허 영 · 임호선
이원욱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기준으로 성장관리방안을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 용도변경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는 토지이용행위는 성장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장관리방안의 적용대상을 개발행위에서 건축물 용도변경까지 확대하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성장관리방안을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넘어 개발압력이 높은 도시외곽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성장관리계획의 정의를 규정하여 제도개념을 명확히 함(안 제2조 제5호의3 신설).
- 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중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장과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결정 전에 다시 공고·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28조).
- 다.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 범위에 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가설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안 제54조).
- 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에 대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의2 신설).
- 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75조의3제1항 신설).
- 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정함(안 제75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 사.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도록 함(안 제75조의4 신설).

아.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대상에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그 개발행위허가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지 않게 개발행위를 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자를 추가함(안 제133조제1항제5호의3 및 제7호의3 신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성장관리계획”이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28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54조 본문 중 “건축물”을 “건축물(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을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을 “성장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9조제2항제2호 중 “성장관리방안”을 “성장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4호”를 “제2호, 제4호”로 한다.

제5장제3절(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성장관리계획

제75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3.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5.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에 따른다.

⑥ 그 밖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3.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및 높이
4.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5.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제7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③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 해당 계획관리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절차는 제75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성장관리계획”으로 본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 내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성장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4(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77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78조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제133조제1항에 제5호의3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그 개발행위허가의 조

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의3. 제75조의4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
지 아니하게 개발행위를 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3조제1항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33조제1항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
발행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133조제1항제7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발행위를 하
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장관리방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은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성장관리방안은 제75
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중 연번 제52호 근거 법률란 중 “제58조”를 “제75조의2”로 하고,
지역·지구등의 명칭란 중 “성장관리방안수립지역”을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의2. (생략) <u><신설></u> 6. ~ 20. (생략)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 ⑦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5의2. (현행과 같음) <u>5의3. “성장관리계획”이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u> 6. ~ 20. (현행과 같음)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 ⑦ (현행과 같음) <u>⑧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 <u>1.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의견을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u> <u>2.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u>

	<u>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u>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u>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u>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 <u>건축물(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u> ----. ----- ----- -----.
제58조(<u>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u>)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생략) 2. 도시·군관리계획 및 <u>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u> 의 내용	제58조(<u>개발행위허가의 기준</u>) ① ----- ----- ----- ----- ----- -----. 1. (현행과 같음) 2. ----- <u>성장관리계획</u> -----

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 5. (생략)

②·③ (생략)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하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3.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니하다.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3. ~ 7.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삭 제>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성장관리
계획-----

3. ~ 7. (현행과 같음)

③ -----

----- 제2호, 제4호 -----

해당하는 개발행위가 도시·군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신 설>

-----.

제3절 성장관리계획

제75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3.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
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지역·지구
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
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5.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
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
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
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
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과 해당 지방의
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
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

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⑥ 그 밖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신 설>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75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
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
구역에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성장관리계획
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장관
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
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3.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및
높이
4.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5.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
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

②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제
7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③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획관리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절차는 제75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성장관리계획”으로 본다.

<신 설>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

④ (생 략)

⑤ 계획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

⑤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 내 수립 된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성장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4(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
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
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생략)

2. 관리지역

가.·나. (생략)

다.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
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
하여 적용할 수 있다.

3.·4. (생략)

② ~ ⑥ (생략)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

-----.

1. (현행과 같음)

2.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3.·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① -----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 5의2. (생략)

<신설>

6. ~ 7의2. (생략)

<신설>

8. ~ 22. (생략)

②·③ (생략)

-----.

1. ~ 5의2. (현행과 같음)

5의3.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그 개발행위허가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 7의2. (현행과 같음)

7의3. 제75조의4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개발행위를 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자

8. ~ 2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